

생산량 보전 주장 중단하고 8/8 투쟁으로 쟁취하자

사측은 지금 생산량을 보전하지 않으면 8/8을 시행하지 못하겠다고 억측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사측이 요구하는 생산량 보전량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기아차 집행부는 UPH-UP, 휴일 축소, 단협 개악 등을 담은 양보안을 제시했다가 조합원들의 커다란 반발을 샀다.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제출한 양보안은 지난 3월 조합원들의 불만을 샀다.

좌파 활동가들은 양보안을 폐기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금·노동조건을 지킬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아차 좌파 활동가들은 7월 6일부터 시작될 대의원대회에서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시행' 요구안을 발의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예전에 3무 원칙을 주장했던 좌파적 '현장 조직'들이 생산량 보전 그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기아차의 일부 좌파는 보전 대수 계산방식도 현재의 가동률 98퍼센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후 가동률이 떨어질 때 사측이 그만큼 보전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화성 조립 3공장은 특근 때 안전사고로 생산을 하지 못하자 보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생산량 보전 주장은 사측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 십상이다.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생산량 보전 논리

생산량 보전 논리는 심각한 약점이 있다.

첫째: 요구를 후퇴시키고 투쟁의지를 마비시킬 수 있다. 기아차의 경우, 지부와 지회 집행부는 133만 대, 좌



집행부의 양보안 폐기를 주장하며 양보교섭 반대 시위하는 기아차 활동가들.

파적인 금속 노동자의 힘은 125만 대를 보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대수를 논하기 시작하면, 얼마큼 양보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둘째: 노동자들을 철저히 분열시킬

수 있다. 조건에 따라 노동강도 수준은 천차만별이라, 생산공장 노동자와 판매·정비를 분열시키고 제조와 비제조를 분열시킨다. 제조에서도 직 접생산라인과 타 부문의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생산량 보전 논리는 성과급제, 임금피크제의 기본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핵심이 바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 지급이다. 이는 정몽구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노동자끼리 경쟁을 강화하고 노조 약화와 임금 하락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약점들 때문에 생산량 보전 논리는 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시행을 어렵게 만든다.

사실 현대·기아차지부는 2012년 8/9를 시행할 때 엄청난 생산량을 보전해 줬다. 이 때 빼앗긴 UPH UP, 점심시간·안전교육·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으로 조합원들은 지금도 하루하루가 힘에 부친다. 그런데 또다시 생산량 보전을 해야 한다면, 조합원들도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생산량 보전 논란이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시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현장 조합원과 함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더디지만 타협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노동조건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갑을오토텍 승리

노조 파괴 “용병”들을 쫓아내다

충남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노조 파괴 용병들을 쫓아내며 사측의 노조 파괴 시도를 막아냈다. 지난 몇 년간 부품사 노조들에 대한 노조 파괴 시도가 이어져 왔는데, 그에 맞서 통쾌하게 승리를 거둔 것이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지난해 말 용

병들을 대거 채용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패악을 일삼았다. 특히 6월 17일에는 흥기로 무장하고 공장 라인을 돌며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에 무릎 꿇지 않고 즉각 전면 파업을 벌여 7일

만에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는 지회의 투쟁으로 폭력 만행이 도마위에 오르고, 재고 물량이 부족했던 현대·기아차에도 생산 차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서 가능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하락 속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주목을 받자 사측도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노동자 옥죄는 현장통제 중단하라

현대·기아차 사측이 현장통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현대차 전주 공장에서 근태관리 시도로 마찰을 빚은 데 이어, 올해 전주 엔진공장에서 일방적으로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조기 퇴근'을 단속하는 등 노동자들을 옥죄이기 시작했다. 전주위원회가 잔업·특근을 거부하며 싸우자, 관리자·축탁직·알바 등을 투입하기도 했다.

사측은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협박하는가 하면, '조기퇴근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각 공장 출입문 앞에서 퇴근자 단속을 시작했다.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도 잔업 시간 동안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근태관리에 나섰다.

현대·기아차 사측의 이 같은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올해 임단투를 앞두고 현장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개악안을 관철시키려는 못된 의도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 사측은 체계적인 근태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 사측은 조기퇴근, 근무시간 내 휴게



현대차 전주위원회의 현장통제 반대 특근 거부 투쟁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사측.

실·헬스장 이용, 작업 중 휴대폰 사용, 몰아치기 등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를 통해 품질·경쟁력·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즉, 노동자들을 더한층 쪼여 조건을 후퇴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사측의 현장통제에 대한 현장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이에 압박을 받아 7월 1일부터 잔업·특근 거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투쟁 계획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기층 활동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현대차 변속기 조합원 무더기 징계 반대한다

사측이 "조기 퇴근"을 이유로 변속기 가공라인 조합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주간연속2교대 전환 이후, 생산물량 부족분을 만회하려고 추가 연장근무를 시켜왔다. 8/9 근무체제로 전환이 됐어도 생산물량 압박에 떠밀려 추가연장근무를 해야만 했던 변속기 조합원들에게, 조기퇴근 문제는 야간 장시간 노동에 대한 탈출구였을 뿐이다.

사측이 무더기 징계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전 공장에 현장 통제를 확대하는 데 본보기 삼기 위해서다. 이는 8/8 요구를 무산시키거나 조건 후퇴를 압박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자, 노동자들을 위축하려는 것이다. 지부 집행부는 변속기 조합원 징계 시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 중집, 7월 15일 2차 총파업 결정

현대·기아차 집행부는 7·15 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7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급제 도입,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등. 이는 정몽구 같은 재벌 기업주들의 노동자 쥐어짜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을 청년실업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기업들의 노동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게 진정한 목적이다.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 해소가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인상폭을 제한하려는 정부와 재계에 가로막혔다.

더욱이 정부는 2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역본부 간부들을 잇따라 구속하는 등 탄압에 착수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싸워 온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민주노총의 7·15 2차 총

파업 등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악랄한 시도다.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 민주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7월 15일에 2차 총파업을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지금 현장 분위기는 4·24 파업 때 같지만은 않다. 근래 공무원, 철도, 기아차(5·12 신규채용 합의) 등에서 전체 노동자 투쟁에 악영향을 주는 일련의 배신적 타협이 벌어졌고,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를 방치하거나 동요하기도 했다. 이는 적잖은 조합원들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단결해 맞서는 것은 중요하다. 정부가 우선 가이드라인으로 공격을 감행한다고 각자 임단협에서 대응하는 식으로 투쟁을 분산시켜서는 각개격파 당할 수 있다. '우리는 단협이 있어 괜찮다'며 미조직·취약노조에서 손쉽게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현대·기아차처럼 잘 조직된 노조도 사용자들의 압박을 견뎌 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구나 메르스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떨어진 지금은 싸워볼 만한 시기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대의원대회에서 가이드라인·지침 등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고, 민주노총이 이를 위한 투쟁 시기를 7월 15일로 정했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는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7·15 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특히 현대·기아차지부처럼 강력한 대형노조가 집회, 간부 '파업', 총회 등으로 파업을 비켜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경훈 집행부는 최근 7월 15일에 임단투 출정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또다시 파업을 거부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이경훈 집행부가 이를 공식화하

려 한다면, 민주노총·금속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직접 파업을 호소하고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
하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문의 : 김우용 (기아차 010-3092-9003)
정동석 (현대차 010-8363-5695)